

동아시아 노동과 노동조합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에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 익숙하다. 중국이 1980년대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로 편입된 이후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다. 대개 식민지배 역사나 군사독재체제에서 벗어나 민주화 이행기에 접어들었지만, 글로벌 자본이 노동유연화 전략을 펴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자화, 정리해고 등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자본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들 동아시아 개발 국가에 진출해 왔다. 이러한 생산 네트워크 확장은 저임금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한 생산비용의 축소, 시장점유율 확대 및 수출 전진기지 확보 등의 측면에서 자본에 이익을 안겨주는 한편, 투자본국(한국)과 투자대상국 간의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동아시아 생산분업 관련 논의, 특히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 않다.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력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노동기준과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나아가 범아시아적인 노동규범, 사회규범의 마련이 더

육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로 동아시아에서도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학(geo-politics)적으로도, 지경학(geo-economics)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추격(catch-up)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는 거두었는지 모르나 투자대상국의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제 양적 투자를 뛰어넘는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건비 따먹기나 노동권 탄압 등 좀 더 낮은 노동비용을 쫓는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와 노동규범 마련 등을 포함한 탈추격전략(post catch-up)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진출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 인력의 국내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양과 임금수준 등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이를 넘어선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이주'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던진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연구가 선진국의 각종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 관계 속에서 노동규범과 고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노동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노동브리프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호 특집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들 국가가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 노동조합 진영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Hari Nugroho 교수(인도네시아대 사회학과)는 1998년 수하르토 독재정권 붕괴 이후 경제와 정치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의 역설이라는 뜻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경제에서는 국가의 지배가 시장의 지배로 대체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가속화되었고, 계약직과 인력 외주화 등을 합법화하면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였다. 반면 정치에서는 민주화 영향으로 분권화와 지방자치제가 확산되었고,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대중조직들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아시

아에서 가장 먼저 ILO 핵심협약 8개(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금지)를 모두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기업별노조 체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었다. 노동조합 설립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단위 산별연맹도 100여 개로 증가하였지만 새로운 조합원이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합쳐져 커지지 않았다. 더욱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불안정노동자층의 확산은 새로운 조직화 가능성을 더욱 좁혔고, 정치의 민주화가 생산과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운동 진영은 시장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농민과 노점상들과의 연대에 힘쓰고 있다. 정책 입안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회에 노조 활동가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실제 2014년 총선에서 2명의 노조 활동가가 주의회에 진출하였다).

Aranya Pakapath 연구원(태국 화학노동자연맹·CWUA)은 2014년 5월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이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또다시 미뤄 정치적 불안정기에 놓여 있는 태국 사례를 정리하였다. 태국에서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담론과 정책의 도입으로 이어지면서 단기 계약직, 도급 및 파견노동자 사용 등을 통한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고, 국영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듯이 기업 단위로 강제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이에 대응하기에 너무 취약하다. 물론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파견노동자인 청소 및 유통·화물운송 노동자들 조직화를 통한 정규직 채용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확장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와 관련, 필자는 동아시아 생산분업 체제하에서 각국의 노동조합이 자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범동아시아 노동자 연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LI**